

조동호 · 최정호 낙마에…

## 與 “존중” vs 野 “꼬리 자르기”



여야는 지난달 31일 문재인 정부 2기 국무위원 후보자 7명 중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2명이 낙마한 것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등 의원은 “꼬리 자르기식의 ‘꼼수’ 지명 철회와 자신 사퇴”라고 비판하며 정의대 인사 검증리인 경질을 강하게 요구했다. 반

**한국 “조국 경질부터…박영선·김연철도 지명 철회”**  
**민주 “文대통령 결단 존중…나머지 후보 문제 없어”**

면 여당은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한 야당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협조를 당부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비치 소작을 처단하는 척하며 거액을 보호하려는 듯

평을 내고 “결국 가장 흥결이 큰 김연철 후보와 박영선 후보를 살리고자 한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정의대는 부실 검증을 책임지고 불량품 코드 인사 김연철·박영선 후보 지명을 철회하라”고 지적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장관 후보 7명이 모두 문제라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 만만한 두 사람을 희생양 삼은 것”이라며 “정의대 인사 리인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불법 탈법 관행 혁신방안을 내놓는 것이 개혁정부가 취해야 할 선택”이라고 일갈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의 의문부호가 더욱 커지기 전에 미aghan한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라며 “처음부터 철저한 검증을 거치지 못한 것이 무척 아쉽다. 인사검증 시스템의 대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조 후보자 지명 철회와 최 후보자의 자진 사퇴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평하며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오전 협약 브리핑을 통해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기에 결단을 내린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며 “최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를 본인이 엄중히 받아들인 결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의 박영선·김연철 후보자 사퇴 요구와 관련해 “정치적인 공세가 다분히 느껴지는 그런 것은 수용이 불가하다”라며 “나머지 후보자들에게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생 개혁 법안,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등에 대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 “절박한 심정으로 새로운 변화 모색”

평화당 광주시당위원장에 최경환…제3지대론 강조

민주평화당 광주시당이 지난달 30일 개편대회를 열고 광주시당 위원장으로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을 선출했다.

김대중컨센서센터에서 열린 이날 개편대회에는 정동영 대표를 비롯, 장병완 원내대표, 전정배 의원, 김경진 의원 등 당 지도부들과 국회의원, 지역위원회, 당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최경환 위원장은 수락 연설에서 “3년 전, 총선에서 광주와 호남인

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광주와 호남을 대변해 왔다”며 “광주에 국비 2조원 시내를 열었고, 광산·연진·봉평·에너지밸리 특별법을 만들고 AI인공지능 창업단지를 유치해 광주밸리의 초석을 놓았으며 5·18진상규명특별법을 만든 것도 민주평화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은 극우보수의 길을 가고 있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계파와 패권, 오만과 독선에 빠져 문제해결 능력을 잃고 아무 것

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금이야 말로 평화당이 환골탈태, 과감한 변화를 시도 할 때다. 이대로는 내년 총선에서 모두 죽는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강한 제3지대”를 강조했다. 그는 “건강한 3지대 형성에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정치권 인사 민이 아닌 다당제 협치 민주주의 정착발전을 바라는 각계 각종의 다양한 세력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봉우 기자



### “대선 출마, 황홀한 뒷이기는 한데…”

이낙연 총리·몽골·중국 순방 동행 기자단과 간담회

이낙연 국무총리는 차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포함한 항후 거취와 관련해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당과 국민의 뒷이 대선 출마일 경우를 가정한 질문에는 “황홀한 뒷이기는 한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 총리는 지난달 28일 중국 충청에서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과 민간간담회를 하며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 못 된다. 이제까지도 계획해서 된 게 별로 없다. 앞날도 그다지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여당 일부 의원들과 만

### 취임 만 2년…대선주자 지지율 1위 유지에 거취 관심

“계획대로 사는 사람 못 돼…제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 총리는 재차 “지금 머릿속에 앞날에 대해 갖고 있는 게 없다”며 “그저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더 많이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연일 깨닫고 있다. 정책을 세울 때, 정책을 전달할 때, 집행 과정을 점검할 때 놓지기 쉬운 것들이 꽤 많은데 이제 실수를 덜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올해 5월 말이면 이 총리가 취임한 지 만 2년이 된다. 역대 최장 수 총리 재임기간(2년5개월)을 넘

나 “자연인으로 총선을 도울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아침이 되면 해가 뜰 거라는 정도의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어 “자연인이 되면 더 잘 도와지겠죠”라고도 말했다.

이런 여당 의원들의 규합을 대권 행보로 해석하는 기자들에게 이 총리는 “그런 바보 의원들이 어딨겠느냐”며 “옛날부터 비교적 가까운 사람”이라고 귀국하는 전 용기 안에서 해명한 바 있다.

이 총리는 이번 순방 중에 리커

창 중국 총리와 처음으로 회담을 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로 한중관계가 경색된 이래 양국 총리회담이 열린 것은 2년개월 만이다.

이 총리는 “한·중 총리회담은 (대화 내용이) 거의 전면 공개됐다. 그걸 토대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워낙 엄중한 문제였기 때문에 정감이 오가는 대화를 할 만한 분위기는 아니었다”며 “그래도 (리 총리가) 친절히 들어주고 반응이 있어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회담 분위기를 전했다.

이 총리는 ‘대일(對日)’ 관계 개선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공감하며 일본 고위급과 소통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시사했다. 다만 “8월에 오사카에서 G20 회의가, 10월 하순에 일왕 즉위 행사가 있다. 자연스러운 계기가 있어야 할 텐데 G20이 제일은 아닌 것 같다. 그 다음은 모르겠다”며 여전히 녹록치는 않다고 전했다.

앞으로 남은 해외순방 횟수를 묻는 질문에 이 총리는 “임시국회가 있는 1, 3, 5, 7월을 생각했다. 2번 정도 더 가겠지만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당과 국민의 뒷이 모아진다 해도 대선 출마 생각이 있는지”라는 물음에는 “황홀한 뒷이기는 한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 홍준표 “김학의 하나로 괴상도 비난?…문다혜 건드린 보복”

#### “황교안·청와대·최순실이 목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30일 김학의 사건과 관련 “검증 실수 하나로 과연 괴상도 의원을 그렇게 비난할 수 있느냐. 문다혜(문재인 대통령의 딸)를 건드린 보복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학의 사건을 둘러싸고 역공에 당하고 있는 한국당을 보노라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 중 과 의원의 경우는 어이가 없다는 생각도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 의원은 박근혜 정권 초기 6개월간 잠깐 민정수석을 한 사

람”이라며 “김학의 차관 한 사람 검증 실수를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김 차관은 바로 경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 의원을 “정권 초기 비론 말 하다가 미움 받아 6개월 만에 민정수석 자리리를 내놓고 경질된 사람으로 나는 듣고 있다”고 두둔한 뒤 “지금 민정수석을 2년째 하고 있는 조국과 한 번 비교해보라”고 강조했다.

홍 전 대표는 또 “(과 의원이) 경찰 수뇌부를 질타하고 경질했다고도 하는데, 경찰은 민정수석 관찰이 아니라 정무수석 관찰”이라며 “김학의 사건 무혐의 처리는 과 의원과 채동욱 검찰총장이 경질된 그해 겸

찰총장 직무대행이었던 길태기 대검 차장 때의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의 본질은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증언했듯이 윤안으로도 명백히 식별이 가능했다는 동영상 원본이 있었는데도 왜 흐릿한 사본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했느냐가 핵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저들의 목표는 김학의 혐의 여부가 아니라 어떤 이유를 불여서라도 김학의를 구속하고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부당한 결정이 있었는지, 또 그 과정에서 법무부 정관(황교안)과 청와대, 최순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에 초점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